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 02-3673-2145)
일자	2015. 10. 8 (목)
제목	[보도자료]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총19매)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19대 마지막 국감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
정책실종·민생외면...총선 앞두고 잣법에만 관심 뒤
우수의원 선정 의미없어...국감 제도개선 시급
안행위·정무위·보건복지위 '최악 상임위'
'구태 의원 8인'·'불성실 피감기관장 6인' 선정**

1.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8일)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사상 최다 피감기관(779개)을 대상으로 의욕을 불태웠지만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정감사**였습니다.
2.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년 여야간 정쟁,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파행운영과 '부실·맹탕 국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19대 마지막 국감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했습니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습니다.**
3.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률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4.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는 19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악 상임위'로는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그리고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

복지위원회가 선정됐습니다.

5.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보다는 지역구 현안을 챙기거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서고,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를 보인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축구 한일전에서 누구를 응원하냐”고 물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보여주기식 무리한 권총 시연을 요구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성희롱 발언 의혹이 있다며 바지를 내려보라고 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구태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 출마지역의 지역민원을 챙기며 국감장을 유세장으로 만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장관에서 용인을 통과하는 제2경부 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하라고 요구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갑), 역시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요구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구한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갑), 충남 계룡역~대전 신탄진역 구간과 대전~옥천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옥천-영동) 등 지역구 민원처리에 급급한 의원들도 ‘구태 의원’에 선정됐습니다.
6. 비생산적 부실 국감 부추기고 국감을 방해한 피감기관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극단적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장관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 논란을 불러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7. 올해 779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4년 672개보다 107개 늘어난 사상 최대였습니다.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된 국감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52개(상임위 평균 5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합니다.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한데,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2015년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1. 총괄평가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최악의 졸속 국감’

-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고유한 견제 권한이자 감시 기능 중 하나임. 따라서 국감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될 것임.
- 2015년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전후로 1차(9월 10일~23일)와 2차(10월 1일~8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과거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기대했음. 국민들 역시 정치적 공방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라는 요구가 컸음.
-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고, 결과 역시 참담했음. 국감 초반부터 신동빈 롯데회장 증인출석 문제로 정무위가 파행했고, 교과서 국정화 추진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로 행정자치위가 파행을 거듭함. 또한 국감보다는 소모적 정쟁과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률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짐.
- 의원들도 국정 이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다 보니 여야 간 갈등이 두드러지고,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만을 되풀이했음. 여야 모두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지만, 국감 최대이슈였던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물론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은 철저히 외면당함.
-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움. 정책질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구태와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야 초선의원들의 반성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임.

-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악의 상임위로 평가됨.
- 안전행정위원회는 ‘막말’과 ‘파행’ 상임위였음.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함. 9월 10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반쪽 국감이 됐고, 18일 다시 열렸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음. 연일 막말과 고성만 반복한 안행위는 10월 6일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홍준표 지사의 수감 자세와 자료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또 다시 파행을 겪음.
-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치열했던 초반과는 달리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은 객관적 자료준비의 부족, 핵심에서 벗어난 질의, 정책 대안 부실로 준비 부족과 함께 ‘맹탕 국감’을 드러냄. 정무위는 우여곡절 끝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9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음.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어렵게 채택된 신동빈 회장에게 롯데그룹의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문제, 객관적 자료 제시도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질타하는 수준 낮은 국감이 진행됐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껏 부른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야유를 듣기도 했음. 여야가 롯데그룹 봐주기를 한 것이냐는 질타를 받고 있음. 본질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음.
-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국감이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합의 무산으로 끝내 좌절됨.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21일 국정감사는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감사가 무산되었음. 2015년 국정감사서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국정감사는 복지위원회 뿐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메르스 사태에서 여야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메르스 사태 국감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국민을 기만한 것임.

■ 국감은 ‘나 몰라라’ 총선 앞두고 잣밥에만 관심있는 의원들

- 내년 총선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전력하면서 국감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기차례의 질문만 한 뒤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시종일관 자신의 지역구 현안만 질의하는 행태도 늘어나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준비 부족은 물론,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도 여전했음.
-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어렵게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 라는 질의와 “질의과정에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 재벌문제와 관련 없는 수준 낮은 질의와 평가를 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내 10대 그룹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함. 특히 최근 불거졌던 롯데 사태로 숨겨진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구조와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 어느 때보다 날선 질의가 있어야 했음. 박 의원은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9월 1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발생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사건을 놓고, 국감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형 권총 격발 시연'을 요구함. 이를 두고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국감 시작 30여분 만에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국정감사가 한동안 혼선을 빚었음. 문제제기는 적절했지만, 권총 시연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쳤다는 평가에 결국 사과하기도 했음.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감에서 류시문 회장에게 "회장님! 일어서서 물건 좀 꺼내보세요. 내가 좀 보게"라고 말했음. 김 의원은 류 회장이 "여직원이 진료예약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학병원 비뇨기과 0월0일'이라고 보고하자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르키며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 비뇨기과라고 하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함. 류 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함.
- 유세장을 방불케하며 노골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챙긴 의원들도 상당수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이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천 목재문화체험장의 적극 추진, 잣나무 재선충 예방 등 지역 민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함.
- 9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지역민원을 챙기는 의원들이 다수였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갑)은 장관에게 "(용인을 통과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시지, 왜 장관님 결정을 못하세요."라고 질의함.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도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민원을 챙김.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수원갑)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장관에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당부해 왔고 그때마다 장관은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었다"며 "그럼에도 현재 기본계획수립은 지금까지 완료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수원, 안양, 의왕, 동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함.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옥천-영동) 역시 "충남 계룡역~대전 신탄진역 구간과 대전~옥천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일단 옥천까지 확대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광역철도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데 급급함.

■ 비생산적 부실 국감 부추기는 피감기관의 태도와 국감 방해 행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기관이든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

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법 제14조에서는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보니 19대 마지막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장들의 자료제출 거부, 거짓말, 성의 없는 답변이 여전했음. 국감 기간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피감기관장들의 인식이 비생산적이고 부실 국감을 부추기고 있음.
-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국감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음. 피감기관장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음. 올해 국감에서는 유난히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태도가 많았음.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성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지난 10월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고 이사장은 과거 방문진 감사 시절에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검사시절 맡은 ‘부림사건’의 재심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발언하여 국감 파행을 불러옴. 공영방송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 방송의 미래도 어둡게 함.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4일 기획재정부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한국경영학회가 최경환 경제팀 1년 평가에서 C학점을 줬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야당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준 것도 다행이다”라고 신경질적으로 답함. 15일 국감에서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시간이 8초 남았다. 뭘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겠다”고 발끈함.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감사서 태도문제를 보임. 경남도는 국감자료의 60%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홍지사는 “지방사무 감사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국가사무 감사 권한만 국회에 있다”고 답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함.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을 어떻게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느냐. 경계가 모호하다”며 계속 따져 묻자 홍지사는 “어허참.”이라고 대답해 태도논란을 가져옴. 홍지사의 태도논란은 2013년도 국정감사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질의 “에이”라고 외친 후 두 번째임.
-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국정감사 전부터 기본자료들 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음. 한국마사회가 장외발권소를 통해 고액 마권 구매를 부추기는 사실도 밝혀졌음. 이를 밝힌 국회의원에게 언론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부당압력을 행사함. 더불어 현 회장은 국감장에서 노골적인 '짜증'이 섞인 답변도 내놔 태도 논란을 일으킴. 현 회장은 "저는 면피용으로 답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자문위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최(규성) 의원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등이 있음.

-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은 9월 11일 국감에서 “종북세력을 두더지 잡듯 분쇄하겠다”는 취임사가 논란이 되었음. 야당 의원들은 허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질타했지만 “어디다 대고 고함을 치시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박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함.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원활한 국감 진행을 방해함.

2. 개선 방향

■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올해 779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4년 672개보다 107개 늘어난 사상 최대였음.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된 국감이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52개(상임위 평균 5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함.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한데,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국감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정감사의 한계는 여전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함. 국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의원의 질의 내용과 실제 증인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뒤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45개 소관기관에 대해 국감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한 감사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정감사 제도 개선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익히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음.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용하여야 할 것임.

첫째,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해야 할 것임.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국회 무시행태에 대해 예산삭감이나 주무 장관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특히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사후조치 이행여부의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방안임.

-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각성과 노력도 중요함.

3. 상임위별 평가

■ 법제사법위원회

- 우리나라는 사법신뢰도 분야에서 OECD 42개국 중 39위로 사법제도 전반에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임. 국민들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음. 그러나 국감 초반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사 청탁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투여 형량 문제, 검찰 수사 정치편향성 문제, 한국사 국정 교과서 논쟁, 감사원 외부인사 사무총장 등용문제 등으로 인해 정쟁을 거듭했음. 다양한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전무했음.
- 추석 이후 후반기 법사위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옴. 서울 고등법원 국정감사의 오찬자리에서는 와인이 등장하여 ‘낮술 국감’을 의심 받게 함. 대검찰청의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을 빚은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상고사건이 계류 중인 야당위원의 국감 참석에 대해 여당의 문제제기로 파행을 겪음. 몇몇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있었으나 거듭된 파행으로 인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 상고법원 과다 홍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던 점은 바람직했음. 전주지법 사례와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홍보 집행 내역을 바탕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냄. 상고법원 도입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대한 하급심강화, 대법관 증원 등 다른 해결책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전무했음.
-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등 문서 공개 여부로 파행을 빚음.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 문서 16건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검찰 측은 검찰 조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함. 이번 국감서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킴. 검찰의 구조적 결함, 운영상 문제점 등은 매년 비판하지만 검찰 제도를 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임.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재판’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공소장과 양형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부실한 수사 과정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감사원 국감에서는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외교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함.

- 검찰 과잉수사 문제, 박상옥 대법관 비판 부장판사 징계, 헌법재판소 채용 시 정당경력 기재 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남. 또한 최고일 지검장 전화변론, 법원 내 민사판례연구회 등 구체적 사례들을 통한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음.

■ 정무위원회

- 정무위 국정감사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삼성그룹의 부당합병에서 비롯된 재벌의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부당한 경영권 승계, 불공정행위, 정부의 재벌정책 실패 등의 내용이 핵심이슈였음. 재벌개혁 이슈가 핵심이었던 만큼 초반부터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로 한때 파행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음. 증인 채택 문제로 치열했던 초반과는 달리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은 객관적 자료준비의 부족, 핵심에서 벗어난 질의, 정책 대안 부실로 준비 부족과 함께, 전반적으로 부실했음.
- 정무위는 우여곡절 끝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9월 17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음.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17일 어렵게 채택된 신동빈 회장에게 롯데그룹의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문제, 객관적 자료 제시도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질타하는 수준 낮은 국감이 진행됐음.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어렵게 증인으로 채택한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라는 질의와 “질의과정에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등 재벌문제와 관련 없는 수준 낮은 질의와 평가를 함. 이는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며, 준비 또한 부족했기 때문임. 야당 일부 의원은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분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금감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함. 또한 국내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운사의 지분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신 회장에게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지분 구조를 밝혀내기도 함.
- 삼성그룹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정당하지 않게 찬성한 국민연금 문제도 정무위가 심도 있게 다뤄야 했음.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문제는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대부분 지적하지 않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들이 정당하지 않은 합병찬성 문제에 대해 언급해 대조적이었음.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실태와 불공정행위 제재를 하는 공정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준비가 부족했음. 재벌개혁 이슈 중 순환출자, 금산분리, 일감몰아주기, 무분별한 출자문제 등은 언급되지도 않아 정무위 의원들의 국감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 정무위는 무엇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는 최고의 핵심이슈를 다루기 위해 피감기관과 재벌그룹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수준 낮은 진행을 보여줌. 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감이었음.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 등 경제정책을 감사할 수 있는 위원회 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인세 인상·면세점 특혜 등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보다는 막말과 답변거부 등으로 수차례 정회 등 함량미달의 국감이 진행됨.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답변 거부, 질문 도중 끼어들기 등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정회를 초래했음.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임.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 공무원 노조는 야당원의원의 '재벌의 하수인',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 '기재부 관료 사퇴하라' 등의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생은 뒷전이고 입법부와 힘겨루기에 나섬.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 국감은 법인세 문제·면세점 특혜 등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지적과 정책적 대안모색이 부족하였음.
-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 특혜와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특허수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 모색을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미침. 롯데의 일본 자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만 문제제기 했을 뿐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음.
-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이전 특혜 의혹, 신규면세점 심사기준의 불투명, 롯데·신라 등 면세점의 리베이트 규모 지적, 심사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면세사업 운영 및 선정에 관한 불투명성과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절했음.
- 몇 년간 2009년 인하해준 법인세 정상화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도 끊임없이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혀왔음. 이번 국감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음.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절대 불가론과 야당은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했음. 법인세율을 3%p 내린 것의 효과가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귀속 되었다는 보고서는 의미 있었음. 그동안의 시민·학계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좋은 자료라 평가됨. 기획재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GDP 대비 비중 산계 자료의 오류를 찾아낸 것은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이 엿보였음. 하지만 법인세인상에 대한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 국민의 심리적 저항선인 GDP 대비 40%를 넘긴 것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질타했음. 구체적으로 고액체납자 부실관리 등 세수 결손에 대한 지적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촉구함. 하지만 구체적 증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반면 이한구 의원의 범칙금 등 징벌적 세금 증가에 대해서 지적한 점은 직접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지적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정부가 증세 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하여 세입을 늘렸다고 밝혔으나 이는 모두 실적 부풀리기로 드러남. 또한 차명재산의 과세 누락 발생, 역외탈세 감시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행 방안 촉구가 미흡한 점이 아쉬움.

■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됨. 해마다 반복되는 재탕·중복 질의와 실태조사가 반복되어 정책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교문위의 최대 쟁점 이슈로 부각됨.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외곽에서 발언하는 등 국회 안팎에서 정치적 쟁점화가 됨. 왜곡되고 획일화된 역사관 주입 우려로 야당 의원들과의 날선 공방으로 상임위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함. 교육청 무상급식 실시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차이를 보이며 정치 공방이 계속됨.
- 청소년 자살 증가 실태, 문화재 관리 부실, 학교 CCTV 설치, 문화유산 관리 소홀, 학교 폭력 실태, 수학여행비 격차,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저조, 국외 문화재 환주, 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실태, 학교 보건교사 부족 등은 지난해와 유사한 실태조사가 반복 제기됨.
- 교육부 명의를 광고를 유관기관에 떠넘겨 정부의 정책홍보에 압력을 행사한 실태 고발 사례, 사교육 학원은 늘었지만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대책인 중·고교 방과후 학교는 줄어들었다는 실태 분석 발표는 두드러짐. 카지노 광고가 별다른 규제 없이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도박 불감증과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있어 광고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자유학기제 체험처 안내 사이트 불량 운영 실태 고발과 수도권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부담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었음.

■ 외교통일위원회

- 외통위 국감은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기로에 서있는 점, 8-10월 사이 동북아 주변국가의 여러 정상급 회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국감이었음.
- 그러나 외통위 국감은 오히려 작년 국감보다 양질 모두 저하된 측면이 있음. 작년 국감에서는 전작권 연기, 남북대화 중단에 따른 문제 지적, 사드 배치, 5.24조치 해제 논의,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 핵심 현안을 두고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음. 올해 역시 8.25합의, 10월 노동당 창건일 즈음한 북한의 로켓발사 여부, SLBM대응, 탄저균 반입 사건은 물론 5.24조치, 금강산관광, 대북전단 살포, 통준위 1년 활동 검토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음. 그러나 올해 외통위 국감은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적 자료발표나 대안 제시는 드물었으며 열과 성의를 다해달라는 주문형 질의나 작년 자료 재탕수준 또는 원론적, 나열식 문제 지적에 그침.
- 특히 한반도 외교, 통일, 안보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로 귀결되는 게 핵심인데,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방향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이 여야 모두 미흡했

음.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하는 방향을 강력히 제기하는 경우가 부족했음. 또한 연내 여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 역시 부족했음. 5.24조치 해제 논의 역시 작년과 별반 차이 없는 자료 분석에 그침. 이외에도 탄저균 반입 문제에 역시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재발방지 촉구가 미비했음.

- 정부 기관 역시 국감에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빈축을 샀음. 윤병세 외교부장은 한-호주 '2+2 회담' 참석차 국감 이석을 요청했으나, 여야간사는 물론 위원장에게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외통위 행정실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했음. 외교부 역시 재외공관 영사만족도 평가, 재외공관 근무실태 보고서 등 국가안보와 별 관련 없는 자료마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태만을 보임. 통일부 역시 국회에 자료를 최대한 주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지적되는 등 정부 기관의 국감을 기만하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임
- 다만 5.24조치를 두고 해제 여부를 두고 여야의 여전한 시각차가 존재했으나 다각적 방법의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또한 여야 모두 대북강경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다는 점 역시 긍정적임.

■ 국방위원회

- 국방위에서 차기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서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총 20조원에 달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성과임.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의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질타하는 등 문제점만 부각시켰지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음.
- 방산비리, 북한 목함지뢰 사건, 예비군 훈련장 안전사고 등 이슈에 비해 정책적 성과가 크지 않았음. 야당 의원들은 2008~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새로운 것이 없었음. 국방부 해킹 의혹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 날카로운 이슈제기와 정책대안 제시가 거의 없고, 병영 복지와 관련된 단발성 문제제기가 주를 이룸.
- 작년에 '군피아' 폐해를 드러냈던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9월 17일 방위사업청 대상 국감뿐 아니라 9월 22일 해군과 공군 감사에서도 각종 비리와 사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음. 해군에서 방산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군의 공정한 인사와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촉구함. 해군은 방산비리 척결 방편으로 시험평가 조직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함정획득사업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방산비리와 무기 획득체계 전반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 외에 제도적 변화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정책적 고려없이 문제가 불거진 방사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됨.
- 초반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작계 5015'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계획 수정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대부분 사안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옴. 국방위는 10월 5일 오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비공개 의

원 간담회를 열어 '작계 5015'의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합참의 거부로 무산됨. 의원들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려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졌고, 국방위 관계자는 추후 작계 5015의 보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하고 이 문제를 정두언 국방위원장에게 일임함.

- 최전방 방탄복 지급 부족, 수명짧은 야간투시경, 교체되지 않은 수통, 생활관 식기세척기, 생필품 예산 등 병영 복지문제와 관련된 단발성 문제제기가 주를 이룸. 코레일이 폐지를 계획했던 군 장병 열차 할인 제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 '입영적체', '병역 면탈'에 대한 대책마련도 병무청이 수용함.
- 성추문 의혹이 있는 육군 소장 홍모씨가 암치료를 핑계로 서둘러 전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사건을 집중 추궁해 정부의 수사를 이끌어낸 것은 긍정적임.

■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음.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장에게 총기 시연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뒤 사과하는 일도 있었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쟁을 부추김.
- 10일과 18일에 걸쳐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와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이 지자체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여야 의원 모두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함. 또한 기재부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과세권 침해' 라는 지적이 이어짐.
- 경상남도 국정감사는 홍준표 도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의 자료제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짐. 경남도에 112개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중에서 22개만 받았으며 무상급식과 메르스 대응 체계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보은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지방재정 문제, 돌고래호 사고, 경찰 총기 사고, 관피아 문제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들이 많았으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함.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구파발 총기 사고에 대한 지적과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남. 경찰의 세월호 집회 등에 대한 과도한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차벽' 설치 문제를 놓고 야당과 경찰청장 간 격론이 오가기도 함.
- 국민안전처 국감은 첫 국감이자 굵직한 문제가 많은 국감이었음.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하여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표류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돌고래호 수색에 혼선을 빚은 점, 구조인력이 '골든타임'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점 등 부실한 초동대처를 강하게 추궁함. 소방관들의 승진에서 지방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대책

등 소방관 처우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의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불법 인수와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추궁과 질타, 세종청사에서 간부가 CCTV를 이용해 특수용역직을 사찰했다는 문제도 제기됨. 고위 공직자의 인사공백 문제제기와 공직자 재취업심사 제도의 부실한 운영 등 공직사회의 다양한 인사문제가 지적됨.

■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국감이 파행 운영됨. 단순 실태조사에 의한 재탕·중복 질의가 반복되는 등 참신한 기획이 돋보이는 정책국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진엽 장관이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원활한 국감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셀프성형 기구 유해성을 지적한다며 이목을 끌기 위한 코뿔, 얼굴밴드 등 보여주기식 구태도 여전했음.
- 별도의 날을 정해 진행하려던 메르스 국감은 청와대 최원영 전 수석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메르스 진상 규명과 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무산됨. 복지부의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불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책 논의 보다는 성남시장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임.
-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 문제, 의료기관 진료비 과다 청구 지적, 사회복지서비스 부정 수급, 노인일자리 부정 수급, 건강기능식품 관리 부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편 질의가 주요하게 논의됨.
- 대안제시 없이 단순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례도 되풀이 됨. 혈액 수입량 증가 실태,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 예방접종 부작용, 건강보험 자격 허위 취득, 보험료 체납 실태, 어린이집 대기자 실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감 의제이지만 정책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련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 감염병 집중 관리를 위한 중앙의료원의 역할 강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 문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시행 촉구, 가짜 백수오 유통문제,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부정사용 문제가 여러 의원들에 의해 집중 논의됨. 박근혜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시행의 실효성 분석 등이 돋보임.
-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시,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방안 등 보육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분석을 통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는 문제제기,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고지원금 삭감 책정을 지적하기도 함.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자위 국정감사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자원공기업 부실 이슈가 핵심이었음. 다음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기업 진출 문제와 에너지공기업들의 부패 문제가 주요 이슈였음.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여야 의원 대다수가 과거에 언급되었던 자료와 내용들을 제시해 새로운 내용들이 없었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파헤치지 못했으며,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도 전반적으로 부족했음.
- 산자위의 국정감사는 상반기 국정조사에서 붙어졌던 자원외교 실패의 연장선 성격이었음.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부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란이 오갔음. 향후 대책으로는 사업에 참여한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실을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가 다수 제시되었음.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비해 부실규모 등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혈세낭비 수준을 제시하는 어느 정도 치밀함을 보였음. 21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차입금이자가 매년 1조원 이상 지급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힘. 나아가 차입금에 대한 대책도 없이 투자를 결정한 3개 에너지공기업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함.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2003년에서 2014년 까지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은 성공사업은 712건 중 6건에 불과하고, 주가조작에 악용되기도 한 점을 들어 자원외교의 실패를 지적함. 해외자원개발 실패 문제는 객관적 수치를 들어 잘 지적하였으나, 책임규명과 함께, 향후 대책 논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부진하였다고 평가됨.
-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진입을 규제하는 유통상생발전법(이하 유통법)은 산자위의 소관임. 유통법은 입점 단계에서 상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 문제, 대형마트 외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전문점을 규제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유통법의 허점과 재벌유통업체들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통한 진출 문제, 불공정행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야 하나 여야 의원들의 준비가 미진하였음.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신규 입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함. 평가서를 유통 대기업 스스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작성 주체를 유통대기업이 아닌 지자체나 제3의 전문기관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인임.
- 해외자원개발과 대형유통업체 이슈 외에는 공공기관 부패 문제가 일부 거론되었음. 공공기관의 부패문제 중 9월 1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퇴직자 회사에 일감 4천 330억원을 몰아준 의혹과 한수원 직원비리(011년부터 5년 간 78건으로 산자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았음) 문제가 눈에 띄었음. 9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소들이 경제성 평가를 부풀린 점과 실적 부실을 감춘 점, 한국중부발전 등

의 입찰담합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함.

- 산자위의 국정감사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들과 대안을 제시하여, 충실하게 임하기 했으나,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국감으로 평가됨.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문제진단과 대안제시 수준이 미약했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가 소득 개선, 농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 요구 보단 일회성으로 지원금 확대 촉구 등 심도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이루지 못했음. 또한 피감기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가사에 집중하기 보단 여야 모두 지역구 획정 등 선거를 위한 행동에 더욱 집중하였고 윤명희 의원 같은 경우 이천 출마를 위해 이천지역의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 대부분 농어촌 현실과 농어촌 대상 정책의 문제진단과 정책 대신 단순 통계, 실태조사 등의 함량 미달 정책보고서가 많았음. 농민단체들이 현재 가장 문제제기 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등 민생이슈에 대해서는 정책평가 및 정책보고서 보단 단순 멘트와 질타에 그친 것이 아쉬움. 또한 매년 반복되는 저수지 수질악화, 수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자기자본 비율 등 매년 지적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
- 여야의원 모두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김영란법에 예외를 두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역구에 대한 표심을 얻기 위한 요구를 함.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김영란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려는 농해수위 의원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움.
-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사고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돌고래호 참사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해양안전사고에 미숙함을 보였음. 이번 국정감사에선 해양안전사고의 최소한의 대비책인 구명조끼 착용율을 높여야 하고 수협이 구명조끼 보급 사업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의원 모두에게 동일되게 나타났음. 또한 표류예측시스템, 초단파 무선통신장비인 VHF-DSC 등 시스템의 오류들을 지적한 점은 사고 대비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줌. 선박검사원 부족, 한국선급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및 재고용,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 성과급 인상 등 세월호 이후 변함 없는 해상안전관리와 무책임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질타하였음. 하지만 질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향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한중 FTA 비준 동의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중 FTA 영향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액을 축소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점은 인상적이었음. ‘중·한 FTA 관산학(官産學)’ 공동연구 보고서 내용을 참조로 한중 FTA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수입액이 12조 8000억원 증가하고 농업생산액은 6조 7000억원이 감소한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개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보여짐.

■ 환경노동위원회

- 환노위 국정감사는 노동개혁이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짐. 정부의 노동개혁을 찬성하는 여당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 국감기간 중 기재부, 산자부,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여 국감이 파행되고 장관에 대한 질의거부가 일어나기도 하였음. 국감 중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짐. 야당의원들은 노동개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였음. 환경분야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주요하게 다루어짐. 이 논의도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여당의 입장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대립함. 야당에 의해 보고서 조작 및 평가위원자격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었음.
- 환노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노동개혁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짐. 국감 초반에는 노동개혁이슈 중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여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지하는데 목소리를 모음. 그러나 정부가 홍보했듯이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저성장국면의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함. 야당의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의 허구성 및 일반시민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함. 야당은 임금피크제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13만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장담한 정부의 광고가 과장되었음을 지적. 또한 임금피크제가 공무원은 제외하고 힘없는 시민들만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형평성문제를 제기함. 임금피크제의 문제점들은 국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은 의미가 있었음. 하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입은 이미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으며, 민간기업에서도 노사갈등 속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 대한 상황진단과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9월 11일 오전, 국감이 시작되기 전 기재부, 산자부, 노동부 장관이 합동으로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개최됨. 이에 분개한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국감이 잠시 동안 정회되었으며, 재개된 이후에도 노동부 장관 사퇴요구하고 질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파행이 일어남. 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기업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 노사정합의가 발표된 후 저성과자 해고가 돈 안드는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라 비판함. 노동개혁안에 대한 허구성 및 실효성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국정감사 도중 정부노동개혁 독자추진 및 노사정 합의 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비판과 대안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사항임에도 노동개혁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한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점과 일반해고 도입 등에 따른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음.
- 환경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였는데, 노동개혁에서와 마

찬가지로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비판함. 여당은 경제성, 장애인 편의성 및 해외 케이블카 설치 사례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케이블카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 야당은 케이블카 설치노선이 산양서식지인 점과 허가 과정 중 심의절차 하자 및 사업보고서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케이블카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누락하였음을 지적, 심의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4건의 단통법 개정안과 1건의 단통법 폐지안이 발의됨. 국회와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효력 및 효과에 의문과 불만이 심화됨. 정부만 단통법 관련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10월 1일 단통법 시행 1년에 맞춰 방통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가 인하했다고 발언.
- 이번 국감에서도 단통법 관련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심지어 명확한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단통법 효과만 재차 홍보해줌. 일부 여당 의원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액이 2013년에 비해 약 26% 줄었고, 특히 단말기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효과로 소비자들이 소비자혜택을 보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 하지만 이통사들의 제무재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ARPU는 계속해서 확대. 또한 최근 SK텔레콤의 영업정지와 함께 지원금의 단통법 감시의 눈을 피해 더욱 음성해 됨.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금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카드3사, KT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2015년에도 홈플러스 등 기업의 무분별한 고객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따른 유출사건이 지속되고 있음.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주민등록법 개정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이번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이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되지 않음. 국회의 개인정보 관련 안일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남
- 정부는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그 중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 국감에서는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그대로 답습. 특히 서상기 의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보다 핀테크 산업과 국가발전 등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우선시 해야 한다고 발언.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빅데이터 산업 관련한 논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편향성 발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지난 10월 2일 미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고 이사장은 과거 방문진 감사 시절에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감사시절 맡은 ‘부림사건’의 재심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고 발언하여 국감 파행을 불러옴. 공영방송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 방송의 미래도 어둡게 함.

■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 대책마련 등 주거안정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와 달리,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많았음.
- 우선 국토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단골 메뉴인 ‘4대강 부채’ 등 4대강 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음. 심지어 ‘고장 난 레코드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며 여야 간 설전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음. 이외에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고액 연봉,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청소미화원 임금문제, 퇴직자 재취업, 한국감정원 통계 부실, 감정평가사 비리, LH 아파트하자 및 직원비리 등 문제제기나 질의가 매년 반복됨.
- 중복질의도 많았음. 한국감정원의 부실한 통계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호의원, 김태원의의원, 김희국의의원, 새정치 강동원의의원, 김경협의원, 김상희의원, 이미경의원이 문제를 제기함. 군 장병 열차요금 할인제 폐지로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희국의의원, 이우현의원, 이학재의원 및 새정치 강동원의의원, 김상희의원, 이찬열의원이 지적함. 그 외에 인천공항 주차요금 인상, LH동탄2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조성 좌초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함.
- 매년 지적됐던 지역 민원 해결발언도 반복됨. 해당 지역구의 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전철 조기완공, 철도 연장, 고속도로 추가 건설 등 여여를 떠나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쏟아냄.
- 심각한 전월세 문제에 대한 지적은 미흡했음. 대안 제시도 없었음. 그나마 7번의 전월세 대책 중 1번을 제외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전세가격 인상 통계자료로 제시했고, 허위·거짓 분양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별 분양률 공개를 요구했음. 또한 고시원의 준공현황을 근거로 장기화된 전·월세난으로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세입자 아픔을 지적함. 내 돈 들이지 않고 집을 마련하는 일명 ‘무피 투자’, ‘전세깡패’라는 신조어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지적함. 최근 4년간 수도권 준전세값이 평균 80% 올랐고,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에 대한 문제 지적 정도가 눈에 띄었음.
-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이슈도 대두됐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도청 보안, 정보보안 설정, 정보보안 전담인력, 개인정보 관리문제 등 지적이 눈에 띄었음.